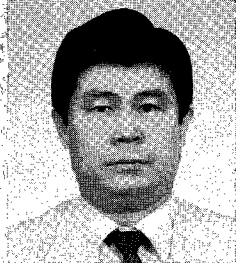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책임자의 짧은 교체 || 무책임한 죄



최 진 호
최진호연구소

19 48년 11월 농림부내에 축산국이 신설된 후 현재의 축산국장은 32대째라 한다. 초대 축산국장이 임명된 후 약 51년 동안 31번 교체되었다는 뜻이다.

이중 동일인이 같은 축산국장의 직을 2번 지

낸 분이 3명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축산국장의 직을 역임한 분은 사람수로 따지더라도 29명이다.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재임기간은 21개월(1년 9개월)이 된다.

이중 최 장수 국장은 1955년 12월 8일부터 1961년 3월 16일까지(5년 3개월) 재임한 제 4대 이남신 국장이고 최단기는 1962년 7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2개월 18일) 재임한 제 8대 유윤수 국장이다.

이밖에도 1년 미만으로 재임한 국장이 총 32명 중 13명이고 이중 5명은 6개월 미만 재임하였다.

축산국장이라 하면 우리나라 축산분야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이다.

물론 위로는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으나 이들은 농업전반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고 전문분야의 실무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국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들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축산국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행정 관리 능력이 우수함을 인정받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새로운 직위에 보임 받아서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최소한 6개월, 좀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그들이 국장이 되기 전에 축산국 내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축산국의 국장으로 승진되었다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농림부내의 축산업무와는 별 관계가 없는 다른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축산국장으로 발령 받아 부임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1년 9개월이라는 평균 재임기간은 축산 국장으로 취임하여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힐 듯 하니까 전보 발령을 받게 되는 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장이 어떻게 소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으며 일관성 있는 축산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뿐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재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업무 파악도 채 하지 못한 채 다시 보따리를 싸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국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해야 할 행정의 방향 등에 대해서 차분히 앉아서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는가.

그러기에는 재임기간이 너무 짧고 그나마 재임기간 중 당장의 급한 문제(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에 쫓겨 허둥대느라 시간 다 보내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볼 시간은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행정과 정책이 그때그때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를 무마하는 미봉책에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책이 잘못되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그 책임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어디 축산국만의 문제이겠는가.

재임기간이 너무 짧고 그나마 재임기간 중 당장의 급한 문제(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에 쫓겨 허둥대느라 시간 다 보내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볼 시간은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정책이 잘못되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그 책임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행정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축산국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부의 어느 국장 또는 책임 있는 자리에 대해서도 과거 그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의 수를 세어 본다면 똑같은 현상이 발견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위치에서 국가의 모든 행정을 조망할 수는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우리나라 관료들이 다른 나라 관료들과 협상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소위 외교 협상)에서 우리나라 관료들은 전문성의 결여로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양계**